

‘660원 코인 100원에’… 가상자산 투자 유도 사기 주의보

공정위 피해보상 민원사례 제시
속칭 ‘주식리딩방’ 전문성 없어
카톡·문자 등으로 소비자 혐혹

2개월간 피해 상담 114건 달해
불법업체 의심될 땐 경찰 신고

A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거래내역이 있는
고객들에게 공정위의 배상 명령 조치에 따라
과거 징수한 수수료 및 주식투자로 인한
손실 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지속 연락을
시도했다. A사가 말하는 보상내용은 ‘현재
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’는 내용이다.

B 유사투자자문회사는 이 회사의 가입비
결제를 대행했던 C 회사가 기존 서비스 가
입자에게 가입요금을 환불해준다는 명목으
로 지속 연락했다. ‘환불은 공정위의 배상명
령에 따른 조치’라면서 공정위의 보도자료
를 첨부해 제공했다.

은행,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

- 부당한 서비스 제한·중단 조항 등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시정 -

□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 이하 ‘공정위’)는 은행·상호저축은행, 금융투자업자,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(이하 금융위)에 시정을 요청하였다.

○ (은행·상호저축은행) 일방적인 금융정보조회 서비스 중단 조항*, 자의적인 서비스 변경·제한 조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(2022년 12월 9일)

* 본인명의 계좌의 실시간 잔액조회, 거래내역 등의 금융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별도 통지 없이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음

○ (금융투자) 계약 자동연장 조항,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(2022년 12월 20일)

*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6개월 단위로 선택기간을 자동 연장

가입을 유도한 유사투자자문회사가 고객에게 보낸 보도자료 /공정위

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유사
투자자문회사의 피해보상 관련 민원 사
례를 제시하면서 “가상자산에 대한 신
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
하고 있다”며 주의를 당부했다.

속칭 ‘주식리딩방’으로 불리는 유사

투자자문서비스는 문자나 SNS 오픈채
팅방,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유료 회
원을 모집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
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
스로, 별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
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.

특히,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
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정위 시
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
하며 소비자들을 혐혹하고 있어 소비자
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, 올해 1월부
터 약 2개월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
접수된 ‘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서
비스 피해보상 안내’ 관련 상담은 총
114건에 달한다.

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, 유사투자
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
게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
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

다는 내용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
다. 심지어 피해보상 안내 문자 발송 시
한국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명
함까지 첨부해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.

공정위는 “공정위 명의의 보도자료
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
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와
문자에 절대 응하지 말라”고 당부했

다. 이어 “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
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
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
다”며 “불법업체로 의심되면, 경찰 및
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”고
했다.

불법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사
이버수사국(ecrm.police.go.kr, 국번
없이 182번),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용피
해신고센터(국번 없이 1332번)로 신고
하면 된다.

/세종=한용수기자 hys@metroseoul.co.kr

산재 노동자 1493명 “권리 구제 받았다”

근로복지공단, 작년 1만건 접수
강순희 “노동복지 허브 역할 만전”

지난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
1493명이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권
리구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.

2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
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접수된
1만107건 중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들
은 총 1493명(14.7%)으로 집계됐다.

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
받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 소송 제기 전
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신속한 심
의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
하고 있다.

위원회가 산재 여부를 심의한다. 법
률·의학·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
명이 산재보험 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되



근로복지공단

근로복지공단

면 심사를 통해 바로 잡는 방식이다.

법원 소송을 거치면 시간이 오래 걸
리고 소송 비용이 발생하지만, 위원회
를 거치면 60일 내 결과를 받아볼 수 있
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.

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“적극 행정을

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 노동자
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며 “일하
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 생애의 행복을
지켜주는 희망 베풀기 ‘노동복지 허브’
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/세종=원승일 기자 won@

농협경제지주
고품질 국산 배
최대 40% 할인

배 소비 촉진을 위한 최대 40% 할인
행사가 진행된다. 농협경제지주는 3월
20일~4월 1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, 한
국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배 소비
촉진을 위한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하고
20일 밝혔다.

이번 행사는 배 생산량 증가와 내수 시
장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배 농가를
지원하기 위한 것으로, 농협몰과 하
나로마트를 통해 농협이 엔선한 고품질
국산 배를 특별할인가격에 선보인다.

농협몰에서는 3월 20일~4월 2일까지
3kg, 5kg 등 배 패키지 상품을 시중 가
대비 최대 40%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.
또 전국 하나로마트 매장에서는 3월 30
일~4월 12일까지 소포장 배(4입봉, 3kg
박스)를 최대 30% 할인한다.

/세종=한용수기자

68만여 대학생들에 ‘천원의 아침밥’ 제공

농식품부, 서울대 등 41개교 선정

서울대 등 41개교 68만여명의 대학생
들에게 1000원짜리 아침밥이 제공된다.
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
육문화정보원은 지난 13일 ‘천원의 아
침밥’ 사업 참여대학 41개소(목표 지원
인원 68만4867명)를 선정했다고 20일
밝혔다.

‘천원의 아침밥’은 아침식사 결식률
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
1000원에 제공해, 젊은 층의 아침식사
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농식품부
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.

질병관리청에 따르면, 2021년 기준
20대 아침식사 결식률은 53%로, 전 연
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.

최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높아지
며 올해 전국 대학교의 사업 참여 열기
가 뜨거웠다. 대학의 총 신청 인원 수가

당초 계획된 50만명을 크게 넘어섰에
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
지원 인원을 대폭 늘렸다.

대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
사를 제공하는 이번 사업에 크게 호응
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지난해 ‘천원의
아침밥’ 참여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‘사
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’는 응답자 비
율이 98.7%에 달했고, ‘아침밥의 중요
성을 느꼈다’는 의견도 91.8%였다.

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“사
업의 취지는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
습관 형성으로 쌀 소비를 늘리는 동시
에 고기가 시대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
덜어주는 데 있다”며 “정부는 ‘천원의
아침밥’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세대
별 맞춤형 쌀 소비문화 형성을 다각적
으로 지원해 쌀 소비 확대를 통한 쌀 수
급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
혔다.

/세종=한용수기자

공정위 제1목적, 공정 경쟁 기반 형성
훼손 않는 범위에서 인수합병 적극 심사

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기업
인수합병(M&A)와 관련해 “앞으로 기
업들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시정 방안을
자율적으로 마련해 제출할 수 있도록
제도화하려 한다”고 말했다.

한 위원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

소(암참)가 공정위 주요 정책 방향을 설
명하고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
‘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특별 간
담회’에서 이같이 밝혔다. 이날 간담회
에는 암참 이사장을 비롯, 조원태 한진
그룹 회장 등 국내외 기업 대표 80여명이
참석했다.

한 위원장은 공정위 핵심 추진 과제
로 ▲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환경
조성 ▲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
거래 기반 강화 ▲대기업 집단 제도의

합리적 운영 ▲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
는 거래 환경 등을 제시했다.

한 위원장은 “앞으로 기업들이 스스
로에게 적합한 시정 방안을 자율적으로
마련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
한다”고 말했다.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
려가 있는 인수합병에 대해 현재 공정
위가 시정 조치를 결정해 관련 제도를
마련한다.

다면,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
개별 M&A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
히지 않았다. 한 위원장은 “공정위 내부
에서 M&A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
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”며 “공
정위의 제1목적은 공정한 경쟁 기반을
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 경쟁을 훼
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M&A에 대해
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원칙을 말
씀드린다”고 말했다.

/세종=한용수기자

한기정 “M&A 시정방안 자율 마련 제도화”